

제301호(2011. 3. 14)

■ 경제 동향

- 2월 CBI, 전월비 4.3p 하락한 68.1 기록

■ 정책 · 경영

- 공정혁신 통해 경쟁력 제고 필요
- 주계약자공동도급, 부실 하도급업체의 수주 증가 우려

■ 정보 마당

- 미래를 보는 방법, 논의와 합의가 기반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민자사업, 공든 탑이 무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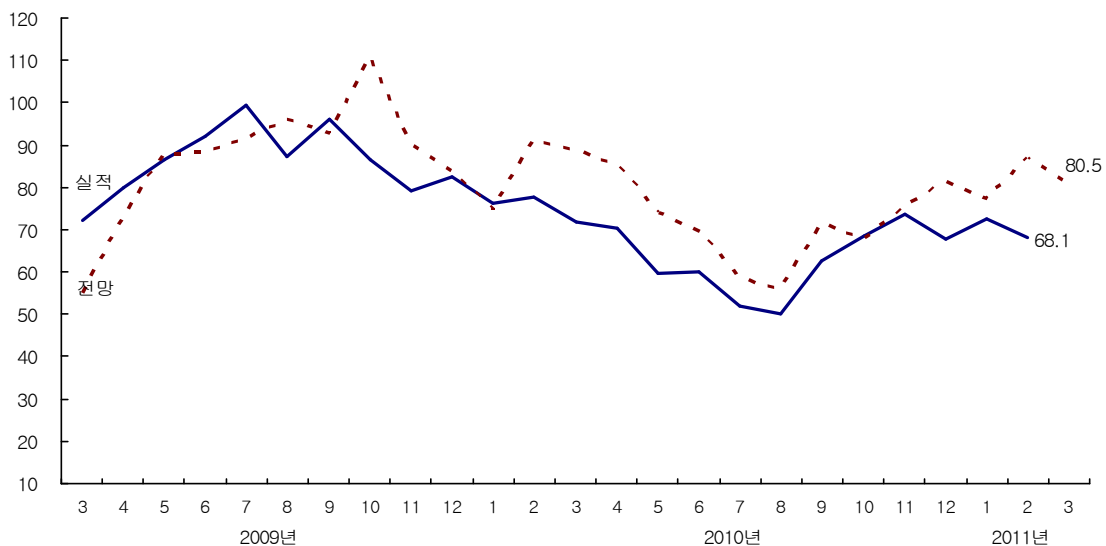
2월 CBSI, 전월비 4.3p 하락한 68.1 기록

- 중동 사태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우려 등이 원인, 대형업체가 지수 하락 주도 -

■ 반등 1개월만에 다시 하락...최근 3개월 간 70선 주위 횡보세

- 2011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3p 하락한 68.1을 기록
 - CBSI는 1월에는 전월비 4.5p 상승해 72.4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개월만에 지난 1월의 상승폭만큼 하락함.
 - 이로써 작년 8월(50.1)부터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CBSI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 까지 3개월 간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70선 주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겨울철에 접어들며 공사 물량이 감소한데다 그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 경기가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더 이상 CBSI 회복세를 견인하지 못한 계절적 요인에 원인이 있음.
 - 아울러 2월 CBSI 하락은 대형업체 지수의 하락(14.3p 하락)이 주도했는데, 이를 볼 때 최근 중동지역의 소요 사태로 대형업체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건설 수주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2월 CBSI 하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월 CBSI 전망치, 2월 실적 대비 12.4p 상승한 80.5 기록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2.4p 상승한 80.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3p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3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그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임.
 - 3월 이후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 발주 물량도 증가하고 주택 사업도 3월부터 본격 분양되므로 3월 CBSI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주택 경기가 이 달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대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이어서 향후 CBSI의 흐름은 이 달 발표될 정부 대책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대형업체 지수는 중동 사태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우려로 큰 폭 하락,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

- 업체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상승했던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12월 수준으로 재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지난 1월에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14.3p 하락한 78.6을 기록하며 2월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최근의 중동 사태로 향후 해외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월에 전월비 8.8p 상승했던 중견업체 지수도 2월에는 전월비 6.1p 하락한 73.1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략 70~80선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반면, 지난 1월 전월비 13.6p 하락한 40.7을 기록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9.3p 상승한 50.0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 업체 지수가 전월비 11.4p 감소했는데, 이는 2월 지수 하락폭이 컸던 대형업체가 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규모별 · 지역별 CBSI 추이>

구분	2010. 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67.9	72.4	68.1	87.0	80.5
규모 별	대형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76.9	92.9	78.6	100.0
	중견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0.4	79.2	73.1	83.3
	중소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54.4	40.7	50.0	59.3
지역 별	서울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75.3	90.5	79.1	99.0
	지방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6.7	46.2	51.2	69.6

이통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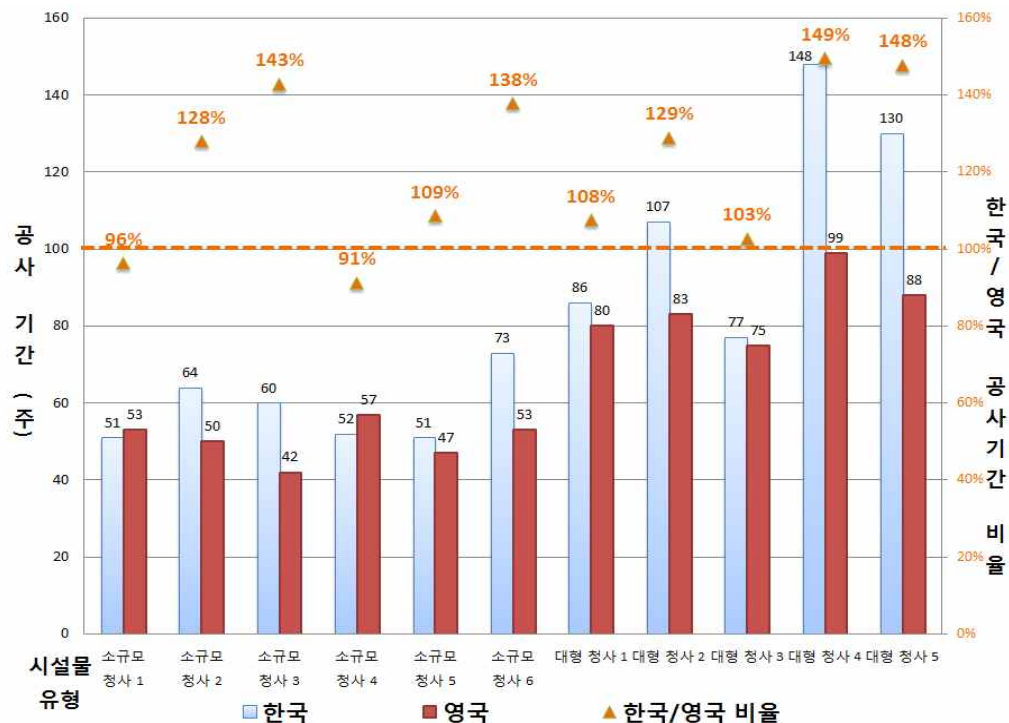
공정혁신 통해 경쟁력 제고 필요

- 기획 · 설계 포함하는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 전략 절실 -

■ 건설 선진국에 비교해 공기 경쟁력 부문에서 열세

-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차원에서 건설 생산 구조의 효율화와 함께 건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공정 혁신 방안이 요구됨.
- 국제 생산성 비교 조사*에 의하면 건설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OECD 가입국 중심의 25개국 가운데 영국이 1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20위를 거둠.
- 공공청사 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설 공기는 영국에 비해 약 22%가 더 길게 걸리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건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공기 경쟁력 차이가 실제로 증명된 동시에 국내 건설 사업에서도 공기 단축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을 시사함.

<공공 청사 사업의 한국 · 영국 간 공사 기간 비교>



* 한국생산성본부(2009), 생산성 국제비교, pp. 46~47.

** 국내 조달청에 계약 요청된 공사 기간 자료와 영국의 왕립공인적산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산하 건물비용정보서비스(Building Cost Information Service) 부문의 공사 기간 산정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예측 값을 활용하였음.

■ 국내 생산 시스템의 현실과 선진국의 혁신 노력

- 우리나라는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포함한 생산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공급 주체의 생산 역량을 최대화하여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인 사례로 장기계속계약제도에 근거한 사업에서는 예산 배정 부족에 의한 공기 지연,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전통적 발주 및 계약 방식은 생산 주체의 공기 단축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못해 건설 기업이 시공 단계의 소극적인 공기 준수 개념에 머물러 있게 만들.
- 이에 반해 영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재인식운동(Rethinking Construction)을 국가 산업 차원에서 추진해 왔음.
 - 혁신 운동의 7대 개선 목표에는 10% 공기 단축, 예측도 20% 향상, 10%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공공 부문 조달 시스템의 개혁, 모범 사례(best practice)의 발굴과 전파, 수립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등을 강조하며 건설 생산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음.

■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생산 프로세스 단축 시도 필요

- 선진 건설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엄연한 생산성 및 효율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차원이나 시공 단계에 국한된 노력이 아니라 기획 및 설계를 포함하는 사업 전 단계의 유기적 통합과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생산 프로세스 단축 시도가 필요함.
 - 건설산업의 공정 혁신은 발주자의 역량과 공기 단축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발주 및 계약 방식의 활용과 투입 자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공기 단축형 입찰 방식의 도입을 통해 발주자 및 사용자의 이익은 물론, 건설 생산 주체의 공정 관리 역량 고도화와 신기술 및 신공법의 개발과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음.
- 향후 건설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공정 프로세스 관리 역량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주력 상품별 공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생산 주체는 공기 단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요소 기술의 개발과 함께 비기술적 관리 능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함.

김원태(연구원 · wontkim@cerik.re.kr)

주계약자공동도급, 부실 하도급업체의 수주 증가 우려

- 글로벌화에 부합되지 않는 변칙적인 제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 주·부계약자 간 하자 분쟁으로 발주자 피해 우려

- 주계약자공동도급이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글로벌화에 부합되지 않으며, 변칙적인 요소 존재
 - 종래의 원·하도급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어지고, 발주자가 종래의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이나, 공사 이행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체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모순이 존재(이 경우, 외국에서는 발주자가 리스크를 부담)
- 발주자 측에서는 공사비가 늘어나고, 계약이행이나 하자책임이 분산되는 문제가 존재
 - 일례로 골조와 창호가 결합된 부분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부계약자인 창호업체와 골조공사를 수행한 주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하자가 방치된 채 법정 투쟁까지 갈 수도 있으며, 결국 발주자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일반건설업체는 매번 새로운 전문건설업체와 짝을 이루어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됨.

■ 부실업체의 시공 참여 증가...‘부실공사’ 및 ‘나눠먹기’ 우려

- 전문건설시장은 시장경제 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 영역인데, 원도급자는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하도급업체를 선별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시공 분야를 하도급함.
 - 기술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는 다수의 원도급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부실업체나 신규 업체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음.
 - 하도급 물량의 2/3 가량이 수의계약 등으로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되는 것으로 추정
- 주계약자공동도급에서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1 : 1로 짝을 이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이 어려워짐.
 - 만약, 일반건설업체 100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발주자가 지정한 공종을 시공할 전문건설업체도 100개사가 확보되어야 함.

- 지자체 발주 공사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를 짝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짝이 될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하여 입찰을 못하는 사례도 존재
- 짝이 될 수만 있다면 신규 업체나 부실 업체라도 대환영을 받는 상황임.
- 현행 방식에서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가장 경쟁력있는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이 이뤄지나,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도입되면 기술력과 상관없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전문건설업체가 비슷한 낙찰 확률을 갖게 됨.
 - 결과적으로 그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마져 어려웠던 부적격한 전문건설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지면서 부실공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전문건설업체 측에서는 자신의 시공능력과 상관없이 짝을 이룬 일반건설업체의 능력에 따라 낙찰 여부가 좌우되면서, 전문건설업체 간 기술경쟁이 무시되고, 적당한 가격으로 운찰에 의존하는 풍토가 조성됨.
 - 기존 원·하도급업체 간 장기 협력관계도 붕괴되고, 일반건설업체와 짝만 지을 수 있다면 손쉽게 공사 수주가 가능해지면서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날 우려도 있음.

■ 발주자-원도급자 간 단일 계약이 바람직

- 건설 하도급에 있어서 불공정성은 해소되어야 하나, 주계약자공동도급과 같이 하도급 문제를 발주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공사이행이나 하자 책임이 분산되고, 기술력이 우수한 하도급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
 -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계약자공동도급과 같이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도급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원·하도급 문제는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되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됨.
 - 만약,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유지하려면,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 직접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기술경쟁을 유도하려면, 입찰과정에서 일반건설업체 이외에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기술력도 평가하는 체제가 요구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미래를 보는 방법, 논의와 합의가 기반

- 미래예측 방법, 다수의 의견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도구 -

■ 「서기 2000년의 한국보고서」의 미래예측*

-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했던 보고서로 과학기술처(현 교육과학기술부)가 1971년 발행한 「서기 2000년의 한국 : 앞으로 도래할 30년간의 청사진」이 있음.
 - 한국미래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진행한 이 미래예측 연구에는 총 1,060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30년 후 한국을 이끌 세대라는 점이 고려되어 555명의 대학생이 설문 조사에 참여함.
- 틀린 예측도 있지만, 2000년의 한반도 및 서울 인구,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현상, 서울과 부산을 2시간 내 연결하는 초고속 대중교통수단의 출현 등을 정확히 예측
 - 전 가정의 TV 소유, 도시 주택 50%이 상의 배관을 통한 가스 공급, 컴퓨터 보급 1만대 돌파 등은 예측보다 앞서 실현됨.

■ 미래예측의 핵심, 논의와 합의의 과정

-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합의는 여전히 미래예측의 기반이 되고 있음.
 - 미래예측은 전문가(혹은 일반인)들의 협력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래예측 방법은 이들의 의견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도구가 됨.
- 또한, 현 세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바로 미래를 만드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미래예측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함.

■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

-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음.

* ‘미래라는 이름의 미로 찾기 학습’, 한국경제매거진(726호, 2009.11) ; ‘미래예측, 정책 색안경을 끼다...정권 따라 변하는 미래 보고서’, 국민일보(2011.2.17.) 참조

- 미래예측은 예측 시점에서는 그 정확도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 과정에서 타당성이 중요하게 다뤄짐.
- 미래예측에 활발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법, 트렌드 분석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사용되기도 함.
-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법, 브레인스토밍, 패널 분석, 퓨처스 휠 등의 방법은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임.
- 이 중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953년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현재까지 미래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델파이 기법이 대표적임.
- 정량적 분석법에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 트렌드 분석, 확률적 분석 등이 있음.
- 「서기 2000년의 한국」 보고서에서는 트렌드 분석과 델파이 기법이 사용됨.

<주요 미래예측 연구 방법>

기 법	주요 내용	주 활용 분야	활용 사례
델파이	·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반복적(4~5회)으로 실시, 제시된 의견 수렴·발전 과정을 거쳐 전문가 합의 도출	· 국가 기술 분야의 미래 진화 양상 예측에 주로 활용, 최근 사회 분야 미래 전망에도 사용	· UN포럼의 'UN 미래보고서 2006'
시나리오	·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들을 도출하여 복수(3~5개)의 미래 모습(시나리오) 제시	· 10년 이후의 장기 예측에 적합, 최근 미국·유럽 등의 미래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해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전략·제품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	· 영국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Foresight Future 2020'
트렌드 분석	· 현재·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나 추세에 근거, 특징, 원인, 발전 속도, 잠재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추세 분석	· 경제 성장, 인구 증감, 에너지 소비량 등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 시계열 자료 분석에 의존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 국가 미래예측 메타분석, pp. 54~57, 발췌 정리

-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미래비전 :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보고서를 발행함.
- 보고서의 미래 시나리오 중 건설산업과 관련있는 내용으로는 '국내 전기에너지 생산의 60%를 개발된 차세대 원자로가 담당',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청정에너지를 수출하는 에너지 부국으로 성장', '대도시 안에 건설된 자동화된 수직농장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초경량 고강도 건축 소재 개발로 1,000m의 건축물들 등장' 등이 있음.
- 현재 제시된 비전은 곧 미래를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30년 후의 미래도 기대해볼 수 있음.

성유경(연구원 · sungyk@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8	경기도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주제 발표자로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최근의 건설 경기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 건설산업 현안 논의
3.10	대한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보좌관 간담회’에 주제 발표자로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관련 토의 참여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 :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 점검 및 대응방안 관련 자문
3.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해외건설에서의 전문인력의 수요 차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택사업의 분할 분양제도와 관련된 공공기관 담당자들과의 토의 및 자문
	서울특별시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 서울포럼 주최 ‘뉴타운 출구전략 토론회’에 토론자로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

■ 연구원 · 주거복지연대 공동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주거복지연대와 공동으로 3.29(화)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복지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제1주제 : ‘최근 전·월세시장의 동향과 문제점’(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기능 회복방안’(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현행 임대차제도의 체계 전환 방안’(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 토론 :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의 사회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
- 문의 :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또는 연구원 기획팀(02-3441-0701, 0815)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개설

- 교육내용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 교육일시 : 2011년 3월 23일(수)~25일(금)
- 교육장소 :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교육대상 : 건설 및 유관업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서 실무자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02-3441-0671)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민자사업, 공든 탑이 무너진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십여년에 거쳐 어렵게 정착됐고 효용성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일부의 높은 사용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

10년 걸쳐 효용성 인정 받아

1994년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토대를 갖췄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외환위기로 인해 활성화는 쉽지 않았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 획기적 유인책을 도입했고 민간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새로운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건설업체와 금융사가 정부사업에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신공항고속도로·부산신항만 등 굵직한 인프라시설에 대한 사업자가 속속 지정됐다. 이후 정부와의 협상, 용지보상, 건설 등의 난관을 거치면서 완공되어 현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성공사례가 현실화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보조금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요즘 진행되는 민자사업은 운영수입 보장이 없음에도 건설비가 최저가 공사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사용료도 재정사업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민간자본에 대한 유인책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 덕분에 조기 공급된 시설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투자규모 이상의 혜택을 국민에게 가져다주었다.

생소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이제 막 그 결실을 거두려는 상황에서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재판에 시달리는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의 상대방인 공공부문이라는 위험요소가 더해지고 있다. 용인 경전철은 민관 갈등으로 준공이 늦춰지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김해 및 의정부 경전철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일부 사업은 공공부문이 불가피한 총사업비 변경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거나 자금재조달 승인과정에서 운영수입보장의 지나친 조정요구로 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 공정성 시비 논란 없애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민간투자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가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많은 노력과 큰 비용을 지불하며 얻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과 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신속하게 찾아야만 공든 탑을 지켜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서울경제, 2011. 2. 18>

김홍수(원장 · infra@cerik.re.kr)